

북한농업 현황과 효율적인 남북농업 협력방안

‘통일농정’ 추진 통해 시장규모 확대해야

‘비료지원 · 증산노력 · 기후 양호 · 식량원조’ 등으로 극심한 식량난 벗어난 듯
초기 소규모 영농자재 지원 불가피, 솔잎혹파리 방제 참여 고려해 볼만

북 조선 농민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돌아간 일본의 어느 한 기자는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북조선 농민들의 생활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쁨에 넘친 생활’이라고 말한바 있다. 정견과 사상에서 결코 북조선 입장에 섰다고 볼 수 없는 이 기자가 무엇 때문에 이처럼 깊은 감동과 경탄을 표시하였겠는가? 우리는 우선 이 사실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해방 후 18년, 예나 다름없이 태양은 남북에 고르롭게 비치고 못새도 자유롭게 오고 가는 한 국토에서 무엇이 북으로 하여금 이처럼 빛나는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는가? 반면에 예로부터 곡창으로 이름난 남조선 농촌이 무엇 때문에 오늘처럼 황폐화하고 농민이 절량에 우는가?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무엇이 남북의 농촌을 이처럼 서로 다른 처지에 놓이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깊은 교훈을 찾고 남조선 농촌이 무엇 때문에 이처럼

가난해졌고 어떻게 하면 고쳐 나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이 글은 북한농업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된 1940년말과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 초까지 북한농업의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북한 농업경제학자가 집필한 ‘농민 생활의 어제와 오늘’의 서문을 인용한 것이다. 이 서적은 북한농업의 발전을 당시 남한의 낙후된 농업현실과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북한농정의 상대적 우월성을 논리적으로 입증시키고 있다. 특히 이 서적은 남한에 비해 북조선 농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각종 농업생산 통계를 비교적 소상히 제시함으로써 북한 농업의 발전상을 실감할 수 있게 만들고 한편으로 남한 농업의 실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북한의 주곡 생산 현황

북한의 주곡은 쌀과 옥수수다. 2004년 기준으로 총 432만톤이며, 쌀(정곡기준)의 생산량과

재배면적은 237만톤의 58만3,390ha, 옥수수는 172만 7,000톤의 49만5,026ha로서 두 작물의 비율은 조곡기준으로 판단하면 60 : 40 정도이다. 다음은 감자가 8만 9,000ha에 25만8,000톤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에는 옥수수가 쌀보다 생산량이 많았으나 식량난을 겪으면서 비료 부족과 지력 약화 등 옥수수 재배상의 문제점으로 대신 감자를 주곡으로 장려하면서 쌀과 옥수수의 비율이 전환되었다. 이외에 최근 북한 농정당국의 적극적인 장려로 작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감자와 귀리, 수수, 콩 등 잡곡이 전체 곡물 생산량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북한 농정의 방향

남북한간 농업생산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근 북한의 농산물 생산 실태와 농정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황 파악을 기초로 하여 북측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남측이 협력할 경우 효과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먹는 문제 해결’은 북한의 국가적인 과제다. 따라서 북한 나름대로 식량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1999년~2000년 간의 북한 식량사정은 1995년~1998년간의 극심한 부족사태는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한의 비료 지원과 자체적인 복구와 증산노력, 양호한 기후여건 등으로 곡물생산이 증가되고 연간 60~70만톤 규모의 외부 식량 원조가 지속되어 식량사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FAO 발표에 따르면 1999년 쌀 생산은 152.3만톤으로 1998년 대비 14%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옥수수는 작물 다양화 및 적기적작 재배 실시에 의해 감자로의 생산전환에 따른 면적 감소(98년 59.3만 ha → 99년 49.6만 ha)와

감자재배 지역의 강수량 부족으로 30% 생산이 감소하였다(98년 176만톤 → 99년 123.5만톤). 보리와 밀은 24.1만톤, 기타 곡물의 생산량은 2만톤으로 전체 곡물 생산량은 347.2만톤으로 추정하였다.

이제 최근 북한이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자.

김정일은 1999년 1월 자강도 현지지도에서 농사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였다. 1999년에는 신년 사설을 통해 농업생산이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먹는 문제해결, 감자농사에서의 혁명, 적기적작, 적지적작 원칙에서 농업구조 개선, 두벌농사 및 종자혁명 계속추진, 토지정리사업의 전군 중적 운동전개 등을 제시하였다. 평양방송(2000년 3월 13일)은 김 총비서가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감자농사 혁명, △두벌농사(이모작) 면적 확대, △복합미생물 확대, △대규모 토지정리, △종자혁명, △초식가축 사육 및 양어사업 확대 등을 ‘통이 크게’ 벌일 것을 지시했다면서 특히 김 총비서가 ‘북한을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인 감자단지로 전변시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즉 옥수수가 재배되고 있는 상당수 지역을 감자로 작물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남북한 농업협력의 한계와 과제

남북한간에 농업협력이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은 남북 농업협력에 대해 남한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선 농업협력은 북한이 남측과 교



남 성 옥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환적 성격의 교류와 협력은 원하지 않는다. 비료, 농기계 및 농약 등 농자재만 남측에서 지원받고 인적 및 현장교류는 선호하지 않는다. 반면에 남한은 호혜적 성격의 농업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면서 남북간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통일농정을 요망한다. 평양은 자신들의 농업기술과 농법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평양의 관심은 남측에 지원받는 비료와 쌀 등의 지원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북한의 방침은 농업이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이고 과거 식량을 부족하나마 자급자족하던 역사를 고려해 볼 때 농업 기술과 농법에 대한 남측의 지도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비롯된다.

둘째, 남북한 농업협력의 문제점은 북한의 농업관련 인사가 남북농업교류를 추진할 만한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과 농업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당과 대남 관련기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농업관련 관료와 기술자들은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셋째, 북한 입장에서 농업분야의 협력이 여타 분야보다 남측에서 얻는 이득이 크지 않다. 농업협력의 이득이 일반 산업분야의 교류나 협력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크지 않으나 개방과 체제 노출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농업협력은 일년에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의 열악한 농촌시설 등이 남측에게 공개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 결국 농업협력은 체제 노출의 위험성은 크면서도 수익이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선호하는 협력분야가 아니다.

효율적인 남북농업 협력방안

효율적인 남북농업 협력방안을 제시한 것은

여러 제약으로 용이하지 않다. 특히 아무리 이상적인 방안이라도 북측이 체제 유지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수용되지 않는다. 또 북측을 빈번하게 방문하는 협력방안 역시 북측에서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우리측 입장에서는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방적인 지원도 곤란하다. 어느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상호 이익이 발생하여 한다. 단기에는 인도적 지원의 형식을 취하지만 지속하는 데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만큼 상호 보완적인 협력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첫째 계약재배의 활성화, 둘째 감자 증산에 참여 셋째, 국제기구의 참여 넷째, 잠업협력 실시 다섯째, 자원조달방안으로 남북농업 채권 발행, 여섯째 수매돈육 및 마늘 지원 일곱째, 각종 영농자재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이중 각종 영농자재 지원에 대해 알아보면, 일단 소규모의 영농자재 지원은 농업 협력초기에 어느 정도 불가피 할 것 같다. 첫째 소형 양수기를 공급한다. 북한의 관개체제는 대부분 양수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양수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다. 주요 농업지역의 관개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경우, 금년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농업 생산성 증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소형 이동식 간이 양수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력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양수기 사용이 불투명하다.

둘째 최근 평양 인근까지 발생한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지난 1993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1995년 이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벼물바구미 방제농약을 공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국내 벼물바구미용 농약확보는 금년 수요 예

북한농업 현황과 효율적인 남북농업 협력방안

상량(3만6,000톤)의 140% 수준(5만1,000톤)을 이미 시중에 공급하고 있고 공장재고량이 4,000톤에 달해 지원 여력이 충분하다. 넷째, 비료 비닐 등 농자재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협력을 추진하면서 주의할 점은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지원조건과 같이 지원대가로 해당 농업 현황을 요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농업현황을 토대로 통일농정의 방향을 수립하고 정확한 북한 농정 분석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결론

비료, 농약, 농기계, 활판(모판설치용), 대죽 등 각종 농자재 산업은 국내농업의 쇠퇴로 사양산업화하고 있다. 특히 비료와 농약은 세계적으로 유기 농산물이 선호됨에 따라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도 유사한 상황이다. 과거 태국 등 동남아에 생산량의 40% 이상을 수출함으로써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입 감소로 국내 재고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만약 연간 30만톤 내외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국내비료 산업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농약 및 농기계 산업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북농업협력 관련 계약재배 방안도 현실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계약재배는 남한의 농산물 종자 및 농자재와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하여 남북한이 필요한 농산물을 공동 생산하여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안이다. 생산량을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할 경우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북한농업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신토불이에 해당하여 유전자 변형 논란이 있는 미국산이나 품질이 열등한 중국산보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호응도

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은 쌀(99%)을 제외한 주요 작물의 자급도가 매우 낮다. 2002년의 경우 보리 60%, 두류 8.8%, 밀 0.2%, 옥수수 0.7%에 그침으로써 이들 작물의 부족량을 중국과 미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수입액만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들 작물을 소량이나마 북한에서 재배하여 국내에 반입할 경우 남북한 양측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농업을 함께 대상으로 하는 통일농정의 추진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남한의 농업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만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북한도 우리의 농업정책 대상으로 포함시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의 출현으로 농업의 개방화가 가속화되면 대규모 영농을 추진하는 농산물 수출국들의 국내진출이 급증할 것이다. 이 경우 국내 농업관련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규모의 확대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농정의 추진을 통해서 만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남한도 잠곡까지 고려한다면 식량 자급률은 30% 미만이다. 북한도 이러한 곡물 작부체계를 탈피하기 어렵다. 즉 북한이 식량자급이 어려운 이상 모든 식량을 생산하여 소비하는 자급자족보다는 일부 주요 작목의 자립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산지가 80%인 북한의 지형상 모든 작물을 자급한다는 것은 냉정하게 표현하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농정의 목표를 정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대량 감소로 기아 등 비극적인 사태를 예방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는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북한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중의 하나일 것이다. Y